

[특집 | 박근혜-시진핑-아베]한중일 보수계열 새 지도자 등장했다

· 박근혜·시진핑·아베 모두 유력 정치가문 출신 공통점… 영토문제 등 놓고 3국 갈등 가능성도

2012년 말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결정했다. 지난 11월 중국 공산당 제 18차 당대회에서의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취임을 시작으로, 일본에서는 12월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승리해 민주당과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한국의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3국의 차기 지도부는 모두 보수적 색채를 띠는 세력이 들어서게 됐다. 동아시아와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의 경우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집권 2기를 맞았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 | 박민규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아베 총리 우익색채 가장 강하게 드러내

동아시아 3국의 새 지도자들은 모두 유력 정치인의 후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외신들은 박 당선인이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사실 못지않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 바 있다. 시 총서기의 아버지 시중현 역시 1959년 국무원 부총리까지 오른 정도로 건국 초기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정치인이었다. 이후 시중현은 정치적 숙청의 희생양이 됐고, 시 총서기 역시 입당이 여러 차례 좌절되는 경험을 맛봤지만 권력층 2세들을 중심으로 한 태자당

세력의 지원을 받아 차기 국가주석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12월 26일 총리로 취임하는 일본의 아베 총재 집안도 일본의 정치 명문가다. 총리를 지냈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 중의원 의원을 지낸 조부 아베 간, 외무대신을 지낸 아버지 아베 산타로의 영향을 받아 지난 2006년 총리 자리에 오른 뒤 다시 한 번 더 총리를 역임하게 됐다. 세 지도자에게 공통된 국가주의적 경향은 이처럼 국가 요직을 맡아 정치적 역할이 컸던 선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난사군도 놓고 인접국과 분쟁 상존

각국의 지도부가 새롭게 들어서는 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크게는 전통적인 한·미·일 축이 유지될 것인지,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개선에 따른 역학관계의 변동이 있을지로 대별된다.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는 1기와는 달리 한국의 새 정부와 북한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까지 고수해온 ‘전략적 인내’ 방침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략적 인내’가 전 정권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해 온건한 기초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밑바탕에 깔려 있던 ‘북한 체제붕괴론’을 따라가는 모양새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 기초가 ‘방임’에 가까웠다면 집권 2기에 들어서면 보다 과감한 정책공간이 열린다는 점에서 볼 때 대화와 협상을 위한 ‘새 판 짜기’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새 판을 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모두를 의식한 전략으로 보인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를 증액시켜 자신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라며 “북핵문제의 악화가 겹칠 경우 한·미동맹을 대 중국 봉쇄의 최전방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노리는 미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 이상의 안보적 긴장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의 새 정부는 대북관계와 한·중관계의 향배에 따라 남·북·중 사이의 호전된 분위기를 바탕으로 대미관계에서 중요한 열쇠를 쥌 수도 있다. 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전향적 변화 조짐에 주목하고 김정은 정권이 개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국 새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쥐려면 향후 대북관계 설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한·중관계 역시 북한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비해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시 총서기의 정치적 부상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강하게 결부돼 있다고 표명한 데서도 볼 수 있듯 남북관계는 한국과 중국 간 관계를 가능하는 잣대였다. 이흥규 동서대 교수는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한·중관계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염

두에 둔다면 박 당선인이 제시할 대북정책의 향방에 따라 한·중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크다고 본다”면서 “중심에 놓여 있는 북한 변수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따라 중국, 나아가 미국과의 외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무엇보다 남북간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 | 연합뉴스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태도를 취한 것도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할 단서가 됐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책에서 정책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찾지 못한 채 경색된 남북관계를 유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통한 실리 획득에 실패했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당시 중국은 한국 정부와는 배치되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잃은 셈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새 지도부의 성격이 양국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양국관계 개선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시 총서기는 박 당선인이 자신과 같은 2세 정치인이란 사실 때문에 일종의 동류의식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중국 외교 MB보다 호전 여지

중국의 대외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확장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영토분쟁 외에도 남중국해에 있는 난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인접한 5개국과 벌이는 분쟁의 위협도 상존하고 있다. 시 총서기와 태자당 세력의 성향은 후진타오 주석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바 있어 총

서기 취임 전부터 주변국들은 양대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대외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특히 난사군도 영유권 분쟁의 경우 분쟁이 확대되면 미국도 개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미국이 개입할 경우 분쟁해역에 매장된 지하자원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자극할 것이어서 두 강대국 사이에 유지된 협력과 대립의 이중적 관계가 급속도로 변할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 미국은 자본주의와 자국 통화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반면 환율과 교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미국의 태도는 동일하다. 전통적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해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홍규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대립하는 구도였지만 북한문제는 미·중 양국간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며 “일본은 갈등구조 내부에서 미국의 지원을 이용하려는 전략인 데 비해 한국은 갈등구조의 외부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아베 총재가 우익적 색채를 강하게 표명하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번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공명당 및 유신회와의 연립정권을 통해 확보한 의석이 개헌선인 중의원 총 의석의 3분의 2 선에까지 이름에 따라 일본 우익세력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대 보유가 가시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방위적 차원의 무장 목적 외에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개헌을 통해 자위대에 군대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 포함된 개헌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기 위해 60년 이상 지속된 군대 보유 금지 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경우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나서 군사적 긴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함께 회의에 임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지도부가 바뀜에 따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 연합뉴스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외교관계의 긴장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에 미묘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본 우익의 시나리오다. 일본 내 일부 극우세력이 지속적으로 자위대의 군 전환과 더불어 주일미군의 감축을 요구하는 것만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을 통해 주변국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한편 대미관계에서도 보다 주도적인 위치를 얻으려는 노력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화량 확대를 통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통상 및 경제정책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일관계의 균형추는 일본보다는 미국 쪽에 쏠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아베 총재의 우경화 정책은 국내정치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박정진 교수는 “일본이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자민당·민주당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어진 추세로 이 배경에는 대지진 피해복구와 재건이라는 과제가 있다”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 이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은 분명한데 떠들썩한 대외관계를 벌이는 것처럼 하고 한국과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 것은 피해 국내적으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지지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는 국가·민족감정이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될 경우의 위험이다. 한국에서도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이 유례없이 강한 입장을 표명해 옴에 따라 중국의 경우처럼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원치 않더라도 국민 여론이 대외정책 방향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임기 전반에 걸쳐 일본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이명박 정부를 이어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에서도 대일관계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양국의 극우 여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위안부 보상 문제에 더해 공세적인 군사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일본 자위대의 군 전환 논의는 대일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 Copyright © 2003 - 2013 . © 위클리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